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4-18】

2014. 6. 23

중국의 4대 금융리스크 현황과 평가

목 차

I. 검토배경	1
II. 리스크 요소별 현황과 평가	3
III. 종합평가 및 경제성장 전망	12

국별조사실

작성: 조사역 박두정 (3779-5709)
pdj@koreaexim.go.kr
확인: 실 장 김주영 (3779-5702)
jykim@koreaexim.go.kr



I. 검토배경

□ 그림자금융¹⁾,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버블, 회사채 부도 등 금융리스크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우려 증대

-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 부채 규모의 급증, 미분양 주택면적 최고치 경신, 회사채 디폴트 발생 등으로 최근 중국의 금융리스크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14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에 못 미치는 7.4%를 기록함.
- 소비, 투자 관련 주요 경제지표* 악화, 금융리스크 우려 등으로 투자 은행(IB)을 비롯한 57개 금융기관의 2014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역시 7.3% 수준으로 하락함.
- 소시에테제네랄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1%로 전망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등은 7.2%, 골드만삭스, 크레디트스위스, BNP 파리바 등은 7.3%, 노무라, HSBC 등은 7.4%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함.

* 2014년 1~2월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 11.8%(10년 만에 최저치)

2014년 2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7.9%(12년 만에 최저치)

2014년 3월 PMI 지수: 50.2(8개월 만에 최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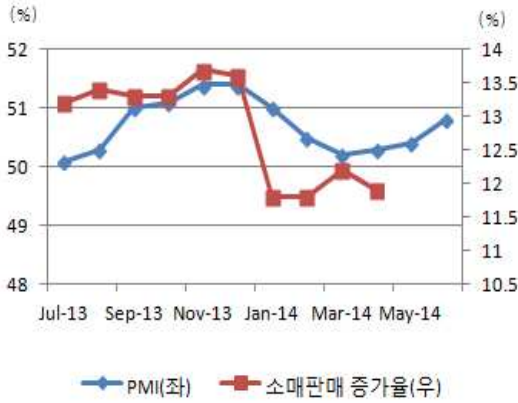
1) 은행권 밖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 기능을 제공하면서 은행과 같은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지 않는 신용 공여를 총칭하며 크게 자산관리상품 위탁대출, 제2금융권 신용, 사금융 등으로 구분됨.

주요 그림자금융 상품의 종류 및 내용

종 류	내 용
자산관리상품	Wealth Management Products(WMP). 은행의 부외거래의 일종으로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은행금리 보다 높은 수익률 제공
위탁대출	기업간 대출 금지에 따라 은행이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중개 수수료를 받고 대출해주는 형태
제2금융	신탁회사, 리스회사, 소비금융, 소형대부업체 등을 통한 비제도권 금융
사금융	개인간 금전 거래



<그림 1> 중국의 월별 구매관리지수 (PMI) 및 소매 판매 증가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그림 2>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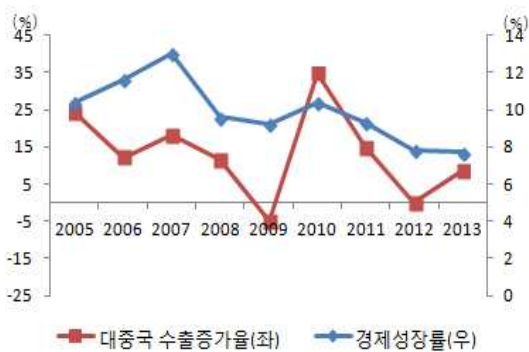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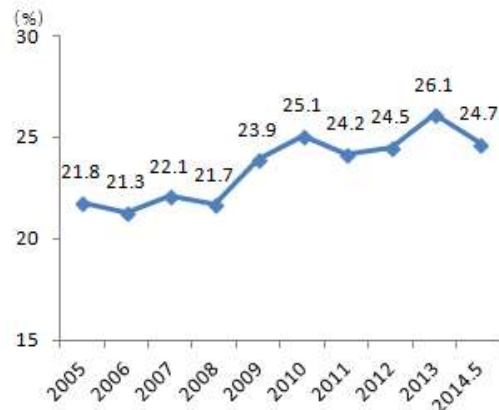
- 중국은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 대상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3년 18.1%에서 2013년 26.1%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대중국 수출액은 2009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 위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 우려가 제기됨.

<그림 3>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한국무역협회.

<그림 4> 대중국 수출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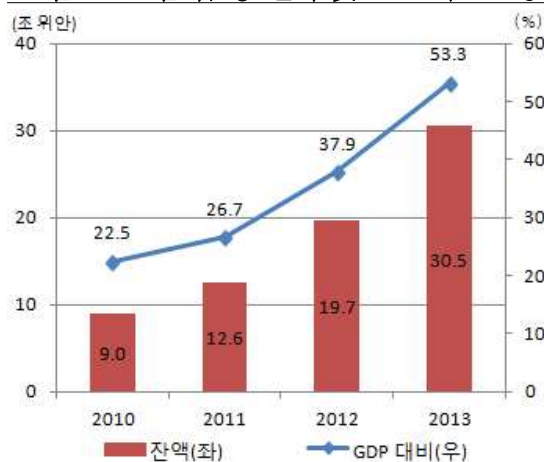
II. 리스크 요소별 현황과 평가

(1) 그림자금융

□ 정부의 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로 그림자금융 팽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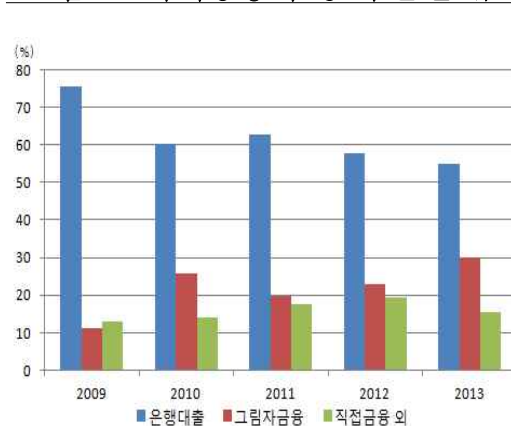
- 그림자금융은 정부의 제도권 금융에 대한 규제로 인해 민간부문 자금 부족의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어 옴에 따라, 2010년 9조 위안에 불과했던 그림자금융 규모가 2013년 6월 30.5조 위안으로 급증하였음.
- 중국정부는 대출·예금 금리 조절²⁾, 지급준비율³⁾ 및 예대비율 설정, 은행 감독관리위원회의 자기자본 충족률 규제 시행⁴⁾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
- 규제로 인해 은행들은 국영기업 대비 담보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였으며 중소기업들의 그림자금융 활용도가 높아졌음.
- 사회총용자대비 은행대출 비중은 2009년 75.6%에서 2013년 54.8%로 급감한 반면 그림자금융 비중은 11.3%에서 29.9%로 상승함.

〈그림 5〉 그림자금융 잔액 및 GDP 대비 비중



자료: 중국인민은행, IMF.

〈그림 6〉 사회총용자 중 부분별 규모



자료: 인민은행

2) 2014년 6월 현재,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3.0%, 대출 금리는 6.0%로 경제성장률 대비 낮은 수준

3) 19.5%로 높은 수준

4)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2013년 11월부터 시행한 중국판 바젤III에 따라 대형은행의 자기자본충족률을 11.5%로 설정하는 등 자본 관리·감독 강화 시행



□ 만기불일치 구조, 부실화 사례 발생 등으로 위기감 증대

- 투자 상품의 만기 집중(2014~15년 중), 그림자 금융상품(단기)과 투자프로젝트 수익 회수 사이클(장기)간 만기 불일치 등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자산관리상품의 경우 만기가 1년 미만인 상품의 비율이 83%를 차지하고 있으나 투자 대상 프로젝트는 수익 창출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함.
- 2014년 1월 중성신탁(China Credit Trust)의 부실화에 따른 공상은행의 개입⁵⁾, 2월 길림신탁(Jilin Trust)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지연 등이 발생함에 따라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함.

□ (평가)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 풍부한 은행총자산 규모, 관련 규제 도입 등을 감안하면 그림자금융 리스크의 영향은 제한적

-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이 낮으며 은행이 보유한 총자산 규모도 그림자금융의 최대 9배⁶⁾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림자금융 부실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은 53.3%로, 파생상품이 발달한 네덜란드(564.7%), 영국(354.4%), 미국(165.9%)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108.3%)보다도 낮은 수준임.
- 그림자금융 확장 억제를 위한 규제 도입, 감독기관의 역할 분담 명확화 및 공조체제 강화 추진 등 정부의 대응을 감안하면 과거와 같이 그림자금융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은 낮으며 위기 발생 시에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중국정부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모 제한과 같은 규제 도입에 나섰으며 인민은행은 향후 그림자금융에 대한 명확한 규범 정의, 리스크 관리시스템 강화 등을 도입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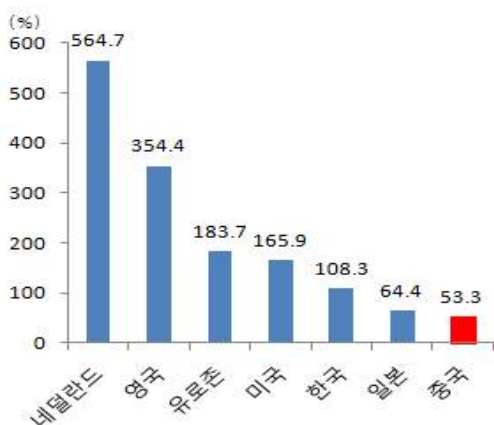
5) 공상은행이 원금 보장을 공식 발표

6) 중국사회과학원은 그림자금융 규모를 은행총자산의 11~16%로 추정



- 또한, 감독 당국은 그림자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관리상품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파산할 경우 손해의 일부를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그림자금융의 무분별한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그림 7> 주요국의 GDP 대비 그림자금융 규모



자료: 중국인민은행, FSB, IMF.

<표 1> 그림자금융 관련 규제와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은감회 (2013. 3)	- 위험자산 중 WMP 비중 제한 - 은행의 비표준화 채권 판매 축소 및 취급한도 설정
은감회 (2013. 11)	- 비은행 금융기관앞 은행의 대출규모 제한
국무원 (2013. 12)	- 신탁회사의 WMP 모집 금지 - 상업은행의 예금과 WMP간 계정 분리

자료: 은행감독위원회(CBRC), 국무원.

(2) 지방정부 부채

□ 과도한 인프라 투자 등으로 지방정부 부채 급증

-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잔액이 2008년 5.6조 위안에서 2013년 6월 17.9조 위안으로 급증하고 지방정부의 과잉·부실 투자 문제도 제기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급속한 도시화로 수익성이 낮은 인프라 투자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방정부의 투자지출이 대폭 상승하여 수지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특히, 인프라투자 및 토지수용에 지방부채의 약 80%를 지출해 부동산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 자금용도별 지출 현황: 도시건설(34.6%), 교통운수(24.4%), 토지수용(11.2%), 공공주택(6.5%)

7) 제12차 5개년 계획수립 중 도시화율 목표를 2015년말까지 51.5%로 계획하였으나 2013년말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53.7%의 도시화율을 기록



- 1994년 세제 개혁⁸⁾으로 조세수입의 50%가 중앙재정에 편입되어 지방정부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재정지출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지방정부 부채가 누적되고 있음.

* 2012년 기준 지방정부 조세수입은 6.1조 위안으로 재정지출(10.7조 위안)에 크게 못 미침.

□ 이자부담 가중, 만기불일치 등 위험요인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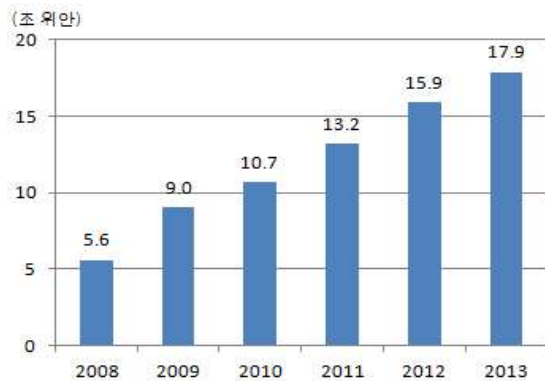
- 예산법에 따른 자금조달 제한⁹⁾으로 융자플랫폼(LGFV)¹⁰⁾을 통한 우회적 자금조달이 확대되면서, 은행대출 비중이 급감한 반면 이자비용이 높은 그림자금융의 비중은 급증하여 지방정부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지방정부 부채의 39.0%를 차지하는 LGFV의 차입금리는 6~8% 수준으로 인민은행이 설정한 1년 만기 대출금리(6%)를 상회함.

* 은행대출 비중: 79%('10)→57%('13.6월), 그림자금융 비중: 4%('10)→16%('13.6월)

- 투자수익 회수에 10년 이상 걸리는 인프라 개발사업에 부채의 약 70%가 투자되고 있으나, LGFV를 통한 자금 조달은 제도권금융 대출보다 만기가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기불일치 위험이 커지고 있음.

<그림 8> 중국 지방정부 부채 잔액



* 2013년은 6월말 기준
자료: 중국 심계서.

<표 2>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만기구조

연도	상환액	비중 (%)
2014	3.56	24.4
2015	2.78	19.1
2016	1.94	13.3
2017	1.43	9.8
2018	4.88	33.4
계	14.59	-

* 2013년 6월말 기준
자료: 중국 심계서.

8) 1994년 세제 개혁은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징수함.

국세·지방세 구분별 요약

구분	내용
국세	소비세, 관세, 차량구입세, 증치세(75%), 소득세(60%), 증권거래인지세(50%)
지방세	영업세, 부동산세, 토지증치세, 증치세(25%), 소득세(40%), 증권거래인지세(50%)

9) 중앙정부의 균형예산 편성을 원칙에 따라 법률과 국무원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예산법 제28조)

10) 재정지원 및 공동투자를 통해 설립한 회사로 지방정부의 보증 및 토지 담보를 기초로 은행, 신탁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업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 또한, 지방정부의 만기 구조상 2016년까지 상환액은 2012년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1.36배에 달하는 8.3조 위안에 달하여 단기적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평가) 낮은 부채 비중, 풍부한 자산 보유, 중앙정부의 존재를 감안할 때 위기발생 가능성 낮아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낮으며 2012년 기준 중앙정부의 순자산 규모¹¹⁾가 52.7조 위안으로 부채에 대응하는 풍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연체율도 2012년말 기준 1.01% 수준에 불과함.
 - 2013년 6월말 현재 중국의 정부부채는 30.3조 위안(약 4.9조 달러)으로 GDP의 58% 수준¹²⁾에 불과하여 일본(238%), 미국(103%), 프랑스(90%)에 비해 낮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14년 1월부터 차환 목적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였으며 2014년 5월부터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광둥(廣東) 등 10개 지역에 대해 자체적인 지방채 발행을 허용함.
- 또한, 위기시 중앙정부가 채무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정부는 지방정부 부채를 2014년도 주요 6대 임무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3) 부동산 버블

□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미분양 주택 면적 증가 등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증대

- 주택공급 과잉으로 2013년 10월 이후 100대 도시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지방도시 중심으로 미분양이 확대되어 최대 40%까지 할인 매각 되면서 부동산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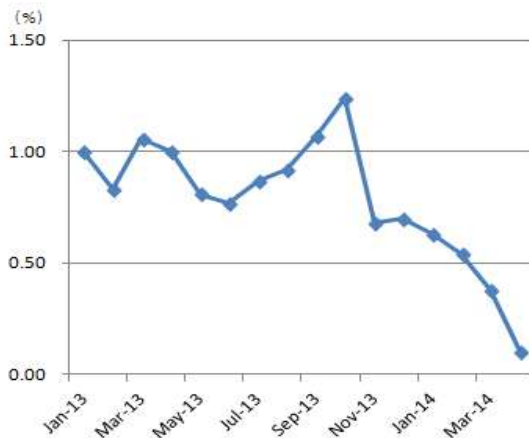
11) 중국사회과학원 ‘중국 재정정책보고서 2013/2014’ 보고서(2014년 2월)

12) GDP 대비 정부부채는 중앙정부가 23.8%를 차지하고, 지방정부가 34.4%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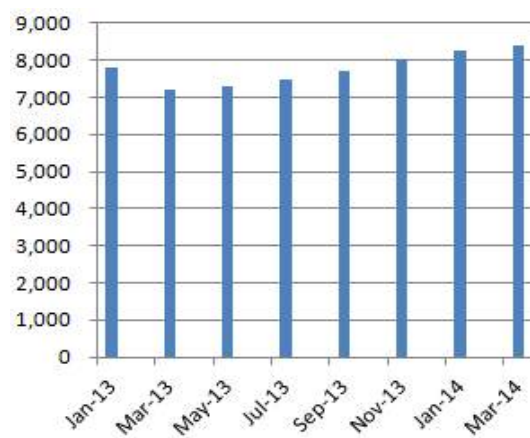
- 상하이 이취(易居) 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3월말 기준 20개 주요 도시의 미분양 주택 면적은 총 8,401만m²로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특히, 항저우에서는 주택 가격 급락으로 12만 채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하여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음.
- 2014년 4월 30개 주요도시 신축 주택 거래면적은 1,266만m²로 전월 대비 4.7%, 전년 동기 대비 21.0% 감소하였으며 5월 베이징 신규주택 거래량은 1,524가구로 전월 대비 52.3% 급감함.

<그림 9> 최근 중국 집값 상승률 동향



* 100대 도시 신축주택 기준, 전월대비
자료: 중국지수연구원.

<그림 10> 미분양 주택 면적



* 20개 주요 도시 기준, 전년동기 대비
자료: 상하이 이취(易居) 부동산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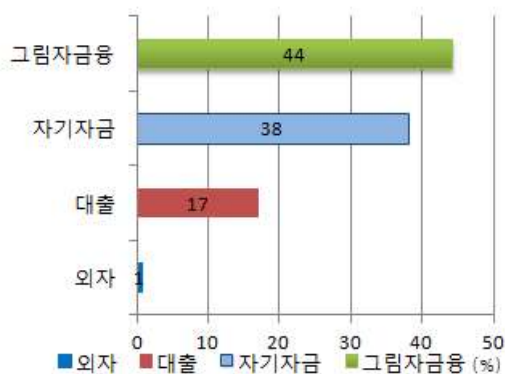
□ 은행권의 대출 축소 등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정책이 소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2014년 1분기 말 현재 부동산대출 잔액은 전년동기 대비 18.8% 증가한 15조 4,200억 위안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3년말 잔액증가율 대비 0.3%p 하락한 수치임.
- 특히, 토지개발 대출과 개인 주택구매 대출액 증가율이 2013년말보다 각각 2.2%p, 0.9%p 하락함.
- * 2014년들어 흥업(興業)은행을 시작으로 교통(交通), 초상(招商), 중신(中信)은행 등이 부동산 대출을 일시 정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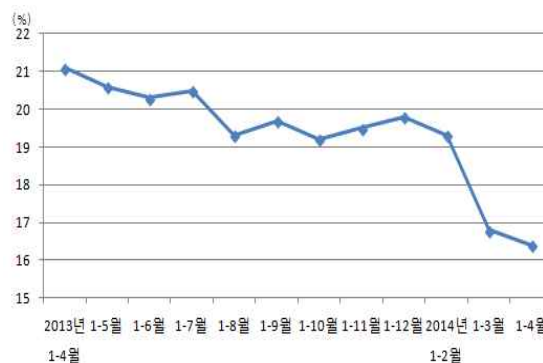
-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자금사정 악화로 전년 동기 대비 부동산개발 투자액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일부 부동산 회사들은 디폴트를 선언하고 있음.
-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1~4월 부동산개발 투자액은 2조2,32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6.4% 증가하는데 그쳤음.
- * 2013년 1~4월 부동산개발 투자액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1.1% 수준임.
- 2013년 중 신축 물량의 67%를 차지하는 중소도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회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 2014년 3월, 중국 저장성 평화시의 싱룬 부동산이 부채 35억 위안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함.
-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투자 자금의 약 44%를 그림자금융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부동산시장 위축 및 부동산 버블 붕괴시 개발업체의 상환불이행에 따른 그림자금융 상품의 연대 부실화 가능성도 존재함.

<그림 11>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조달 방식 비중



자료: WIND.

<그림 12> 부동산 개발투자액 증가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부동산 시장 침체로 관련 철강, 시멘트 등 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철강 생산설비 가동률이 70% 수준으로 하락하고 시멘트 재고가 급증하자 중국정부는 2014년 2월 철강, 시멘트 산업¹³⁾에 대한 생산설비 증축을 2017년까지 전면 불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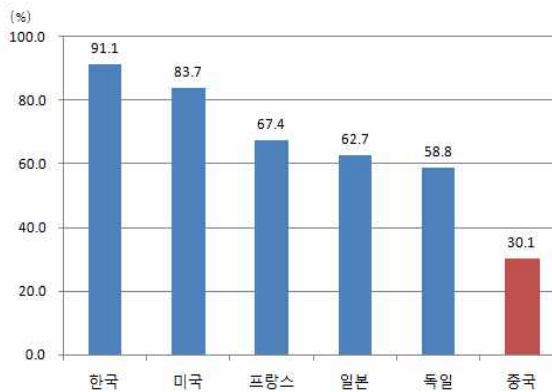
13) 조선,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과 함께 5대 공급과잉산업으로 지정됨.



□ (평가)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고 정부의 지원책 실시로 위기가능성 낮아

- 낮은 가계부채 및 담보대출 비중,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을 감안하면 향후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30.1%로 한국 91.1%, 미국 83.7%에 비해 낮으며, 총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16.0%로 독일 43.6%, 프랑스 42.3%, 미국 23.6%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14년에 1조 위안(1,620억 달러) 규모의 저소득층 주택개발 사업(475만호 규모)을 추진하여 건설업체의 숨통을 틔워주는 동시에 경제성장도 담보하는 정책을 추진함.
- 또한, 2014년 5월, 최근 발생한 미분양 사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은 주요 상업은행에게 주택담보 대출 확대를 촉구하고 부동산 기업들의 증자를 허용한 바 있음.

◁그림 12> 국가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 2012년 기준, 중국은 2011년 기준
자료: CEIC.

◁그림 13> 총소득 대비 주택담보 대출 비중



※ 2012년 기준, 독일은 2011년 기준
자료: European Mortgage Federation, CEIC.

(4) 회사채 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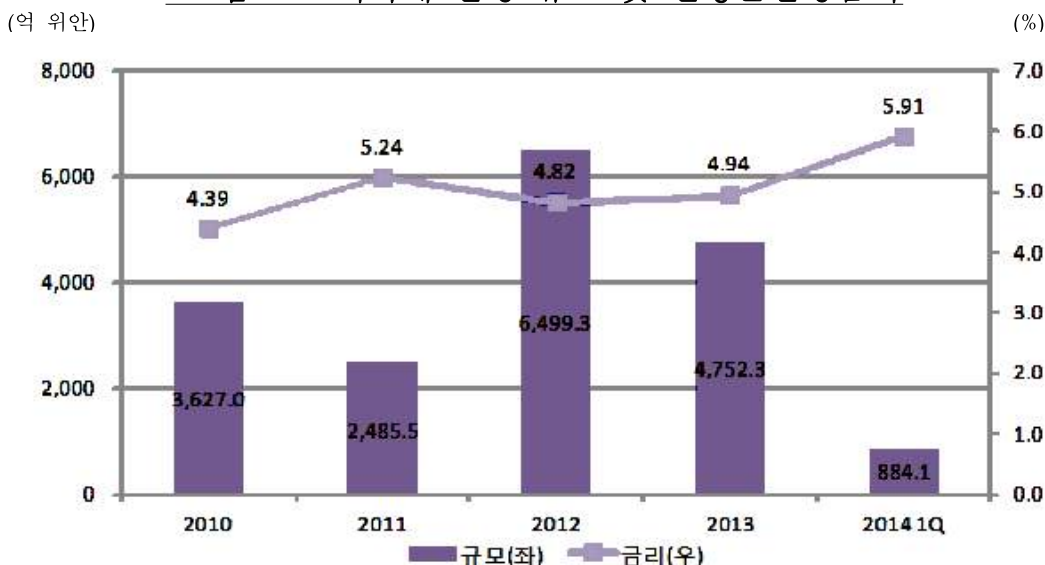
□ 금년 봄 중국 최초로 회사채 부도 발생

- 2014년 3월, 태양광 패널업체 차오르 솔라(超日太陽)가 최초로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시장 불안이 고조되어 2014년 1분기 발행금리(AAA, 5년 만기 기준)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보다 높은 5.9%에 달함.



- 당사는 작년부터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채권은행인 중국농업은행의 6개월 차환을 받았으나, 2년전 발행한 회사채(10억 위안)에 대한 이자(8,980만 위안) 지급에 실패 하였음.

<그림 14> 회사채 발행 규모 및 연평균발행금리



자료: ChinaBond, 국제금융센터.

□ 회사채 발행 제한에 따른 은행권의 자금 공급이 금융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민간부문 자금조달 곤란

-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 4개 부처는 2012년말부터 산하 기관의 채권발행을 제한하고 산하기관의 비금융기관 으로부터의 차입과 지방정부의 보증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¹⁴⁾함에 따라 회사채 발행규모가 급감함.
- 회사채 발행 규모는 2012년 6,500억 위안까지 증가하였으나 시장의 유동성 축소, 회사채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등으로 2013년 4,725억 위안으로 급감하였으며 2014년 1분기 회사채 발행액도 전년도 총발행액의 18.6%에 불과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3년에 철강, 시멘트 등 과잉생산 업종내 기업에 대한 엄격한 회사채 심사 방침을 마련하였으며 재무상태, 분식회계 여부, 담보,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관리·감독함.

14) 단, 국무원의 규정에 부합되는 일부 공공사업의 경우는 제외됨.



□ (평가) GDP 대비 회사채 발행액, 담보 비율,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등을 감안하면 위기가능성은 미미

- 중국의 GDP 대비 회사채 잔액 규모는 9.1%로 한국, 대만,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며 발행주체의 77.3%가 상대적으로 우량한 국유기업으로 위기 발생시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높으며, 회사채의 약 65%가 담보를 제공하고 있어 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첫 디폴트 발생 회사인 차오르 솔라의 경우 미지급 이자의 규모가 10억 위안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

VI. 종합평가 및 경제성장 전망

□ 4대 금융리스크는 정부 통제 가능한 수준

- 최근 중국 경제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실시한 경기부양 정책(4조 위안 규모)의 후유증 해소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의 일환이자 시장경제원리 작동의 시험으로 평가됨.
- 관련 경제주체의 건전성이 양호하고 중국 정부가 이미 정책 대응에 나섰으며, 유사시 중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충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버블, 회사채 부도 등 위험 요인은 중국 정부의 통제 가능한 수준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그림자금융과 부동산 폭락 등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민간부문 자금 경색으로 중국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국유기업이 아닌 생산능력 과잉산업 분야의 중소 민간기업으로 중국 경제의 근간을 좌우할 가능성은 낮음.
- 2014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낮은 정부 부채, 정부의 금융산업에 대한 막강한 통제력 등을 언급하며 중국이 전면적인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함.



□ 정부의 위험 통제능력, 적극적인 정책 대응 등을 감안하면 성장세 둔화 가능성은 낮아

- 중국 정부의 위험요인 통제 능력,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 등을 종합하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안정적 경제성장 하에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설정하였으며,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이 언급되자 2014년 4월, 영세기업 세금감면, 저소득층 주택개량 및 철도건설 금융지원 등을 통한 경기부양 계획을 추가로 발표함.
- 최근 유럽을 순방중인 리커창 총리는 금년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경착륙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세계은행은 2014년 6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고용창출 확대, 소득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위안화 약세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 2014년 경제성장률이 7.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조사역 박두정(☎02-3779-5709)
pdj@koreaexim.go.kr